

‘성완중 파문’에도 식지않는 광주서을 보선 열기

문재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간담회·기아차 방문 등 경제 행보

정승, “서창지역 6000억 투입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하겠다”

천정배,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파크·융합과학대학원 설립 약속

4·29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개시일(1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전이 뜨겁게 달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아권 분열’로 위기감이 고조된 ‘뒷발 사수’를 위해 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다시 찾아 호남 민심 보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 등은 서구 발전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새정치 바람’ 차단을 위한 맞불을 놓았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간담회와 기아차 방문 및 노조 오찬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를 키워드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조영택 광주시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성완중 리스트’ 파문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과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와 제1야당간 대결구도를 부각, 아권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함으로써 ‘천풍’(천정배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문 대표의 광주행은 대표 취임 이후 지난달 22일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보고대회, 지난 1일 현장 최고위원회 참석에 이어 세 번째이다. 조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는 문 대표와 호남 출신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출석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완중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 정리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 총리가 2013년 재선거 당시 3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장을 거론하며 “대정부질문을 계속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불법

대선자금에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 새정치연합에 힘을 실어줘야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할 수 있다”며 야권 결집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대선 실패를 언급하며 “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고 달려지고 있다. 이번에는 절대로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뒷발 민심을 달래기에도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는 “성완중 리스트”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데도 새정치연합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돼야 심판할 수 있다”면서 “광주가 (새정치연합에) 다소 섭섭한 점이 있다면 소담대실 해선 안 되며, 광주에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재보궐선거를 모두 승

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모두가 단합해서 열심히 골목골목을 누비고 서구민들과 광주시민들을 감동시키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서 “조 후보의 손을 잡고 서구의 골목과 대로를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선거지원을 약속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 총리는 국민 신뢰를 잃어 버린 만큼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표는 출범식 후 시장 방문, 소상공인과 만난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광주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5일 새벽 청소년노동자 간담회를 한 뒤 상경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이날 서창 종합개발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서창지역에 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관광단지로 조성해 6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특동 탄약고 이전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힐링한옥 리조텔단지’와 ‘아시아 프렌들리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서창 종합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21세기 서구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강조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도 이날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천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와 수소에너지, 핵심부품 등의 원천기술을 생산할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이곳에 융합과학대학원을 설립, 창업형 인재들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15일 오전 광주 금호동 선거사무소에서 ‘민심찬십캠프’ 출범식을 열고 공식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의당도 이날 광주에서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미 선거사무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4일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조영택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캠프 출범식에 참석해 조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 지역발전, 민생안정’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야 ‘성완중 파문’ 격돌 심화

성완중 불법 정치자금 공여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4일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여권 인사 금품 제공 주장과 관련해 “성완중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씨앗은 참여정부부터 움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되지 못했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만일 이 법안에 대한 거

與 “성완중 부정부패 씨앗은 참여정부부터 움텄다”

野 “성완중 2007년 특사, MB당선인측 의견 반영”

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완중 회장처럼 짧은 기간 두 번이나 사면을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 성완중 전 회장의 대야건설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선팀에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뉴스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성완중 전 회장 사면은 당시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5년 사면은 야당 정치인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며, 2007년 연말 사면도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 측은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

고 있다.

정동영 후보 측 임종인 대변인은 지난 13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난 2007년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시절 이뤄진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사였다”며 “특혜성 또는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2007년 특별사면의 경우 초고속 사면이었을 뿐 아니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검찰 수사나 특검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 대표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성완중 블랙홀’

국정현안 실종

4월 임시국회 정치공방 ‘빈손’ 우려

이러바 ‘성완중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4월 임시국회 개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들이 공무원연금·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이틀째 계속된 대정부질문도 ‘성완중 파문’이 관련된 여야 공방으로 정책 관련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오는 16일부터는 4·29 재·보궐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개혁 법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개혁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법률안을 상정해 토론한다. 이어 21일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23일부터 30일까지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진행하는 개혁안 논의 내용을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특위는 소위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물론 공무원단체 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여야 모두 모든 신경이 ‘성완중 파문’ 후폭풍에 가 있기 때문이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도 녹록지 않다.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을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크고 서비스기본법도 야당은 의료영리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처리도 4월 임시국회 내에 하기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지만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미래형 친환경차산업 육성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산구갑)은 1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자동차산업분야 전문가인 이항구 박사(KIET)와 홍성안 박사(KIST)가 참여해 각각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 방안,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조성방안을 발제하고, 주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중인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광주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산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육성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